

영국 ‘보수주의 신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

■ 조사결과 개요

- _ 영국 ‘보수주의자 신조’에 대한 국민 생각, 대체로 긍정적
- _ 마이클 하워드 당수 ‘보수주의 신조’ 원문과 설문 비교

■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기본 관점

- _ 개인 이익 추구 긍정 / 공동체 위한 제한, 찬반 팽팽
- _ 여자 2030세대, 다른 세대 보다 ‘공동체’ 중시
- _ 호남과 영남의 관점 차이 있고, 직업별 관점은 비슷
- _ 소득별 관점 차이 다소 드러나고, 이념적 차이는 뚜렷

■ ‘개인 자유’에 대한 생각

- _ 한국민, ‘개인 자유’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 강해
- _ 2030세대, ‘외고 등 필요’ 동의도 높아
- _ ‘외고 등 필요’ 동의도, 지역별 직업별 차이 있어
- _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대비되고, 이념성향별 차이 나타나

■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

- _ ‘정부 역할’ 부정적 의견 높고, ‘약자 복지’ 동의도 높아
- _ 2030세대내 인식 차이 크고, 4060세대 인식 비슷
- _ 지역별 차이 거의 없고, 자영업자 동의도 특히 높아
- _ 저소득층 동의도 낮고, 이념성향별 차이 뚜렷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2년 9월 4일(일) ~ 9월 6일(화)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 본 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1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8\%$
가 중 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2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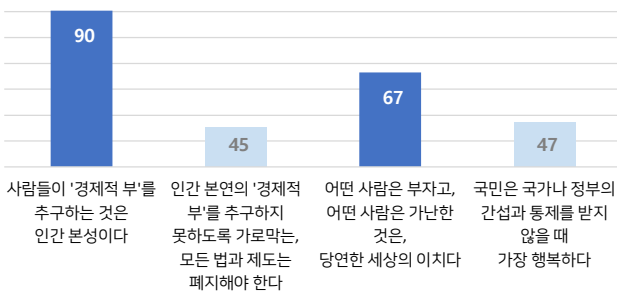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결과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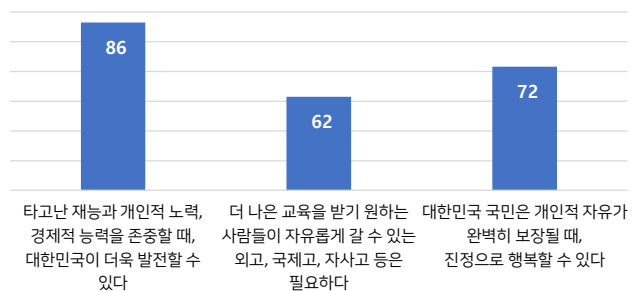
□ 영국 '보수주의 신조'에 대한 국민 생각, 대체로 긍정적

- 이번 조사에 사용한 설문은 영국 보수당 마이클 하워드 당수가 발표한 '보수주의 신조' 문항임
 - 마이클 하워드 당수는 2004년 1월 2일 자신의 보수주의에 대한 신조를 신문 광고를 통해 공개함
 - 하워드 당수는 "서로를 혈투는 데 익숙한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에게 진정한 보수당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광고를 냈다"고 게재 이유를 설명함
 - 그는 영국 보수당의 정신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진정한 보수주의자로 꼽히는 인물로, 당시 신문 광고는 영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음
- 원문을 한국적 상황에 맞춰 수정·질문한 결과,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람들이 '경제적 부'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 본성이다'는 항목이 90%로 가장 높은 동의도를 기록했고, 다음은 '정부는 국민 모두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87%), '타고난 재능과 개인적 노력, 경제적 능력을 존중할 때,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86%) 등의 순임
 - 가장 동의도가 낮은 항목은 '인간 본연의 '경제적 부'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법과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45%)이고, 다음은 '국민은 국가나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하다'(47%)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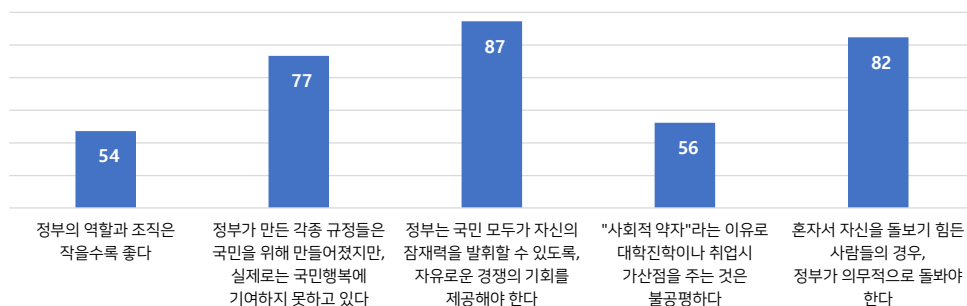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기본 관점, 동의도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개인 자유'에 대한 생각, 동의도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 동의도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Kstat Point

- ☑ 영국과 한국의 역사와 이념지형이 다르기에, 영국 '보수주의'와 한국 '보수주의'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 즉, 영국 '보수주의 신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한국인이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님
- ☑ 이번 조사는 영국 등 서구에서 통용되는 '보수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을 통해, 한국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함임
 - : '보수주의'의 어떤 점에 호응하고 어떤 점에 반대하는지를 인지할 때, 한국의 보수정당은 물론 진보정당도 정책·정치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이클 하워드 당수 '보수주의 신조' 원문과 설문 비교]

- ☑ 하워드 당수의 '보수주의 신조'는 총 16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정치적 수사들로 표현되어 있음
- ☑ 이들 문항을 그대로 조사에 사용할 경우 자칫 '당위적으로 옳다'고 응답할 우려가 있어, 최대한 정치적 수사를 걷어내고 보수주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설문을 만들 (이 과정에서 필요시, 한국적 상황에 맞는 문구 삽입)
- ☑ 이러한 과정을 거쳐도 '당위적으로 옳다'고 응답할 수 있는 항목의 경우, 설문에서 제외함
- ☑ 실 설문은 "선생님은 다음 각각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 생각대로 응답해 주세요."라는 질문 후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③ 동의하는 편이다 ④ 매우 동의한다 ⑤ 모르겠다 등을 제시함
- ☑ 아래는 하워드 당수의 '보수주의 신조' 원문이고, 화살표 문구가 이번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임

나는 믿는다.

01.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과 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나는 믿는다.
→ 사람들이 '경제적 부'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 본성이다
02. 국민이 인간 본연의 야망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라고 나는 믿는다.
→ 인간 본연의 '경제적 부'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법과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03. 국민은 그들이 삶의 주인이고 간섭과 지나친 통제를 받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나는 믿는다.
→ 국민은 국가나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하다
04. 국민은 커야 하며 정부는 작아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 정부의 역할과 조직은 작을수록 좋다
05. 관료·형식주의, 갖가지 규정과 조사관, 각종 위원회와 독립적인 정부기관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인간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나는 믿는다.
→ 정부가 만든 각종 규정들은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국민행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06. 모든 국민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 정부는 국민 모두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07. 책임없는 자유는 없으며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나는 믿는다.
→ 혼자서 자신을 돌보기 힘든 사람들의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돌봐야 한다
08. 불공평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며 기회 균등이야말로 중요한 가치임을 나는 믿는다.
→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대학진학이나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
09.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나는 믿는다.
→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외교, 국제고, 자사고 등은 필요하다
10. 모든 어린이는 노후에 자신들의 부모가 편안하기를 바란다고 나는 믿는다.
11. 영국인들은 그들이 자유로울 때만이 행복하다고 나는 믿는다.
→ 대한민국 국민은 개인적 자유가 완벽히 보장될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12. 영국은 언제나 영국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13. 행운과 타고난 재능·노력, 그리고 부의 다양성을 통해서만이 섬나라인 영국이 고귀한 과거와 약속하는 미래를 가진 위대한 사람들의 고향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 행복하다.
→ 타고난 재능과 개인적 노력, 경제적 능력을 존중할 때,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나는 믿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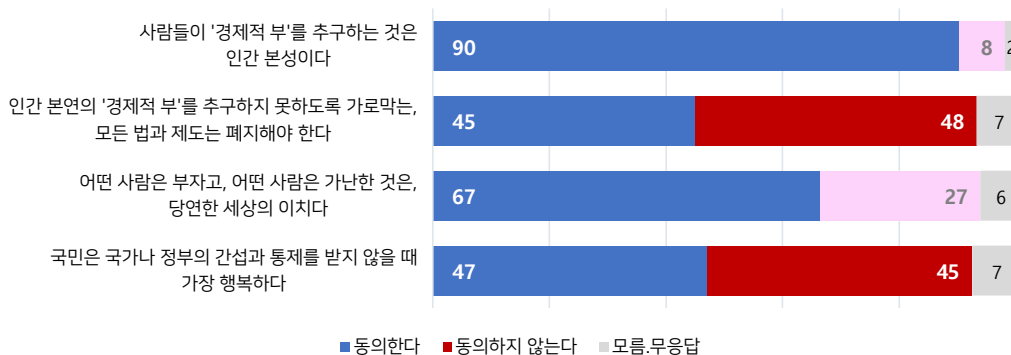
14. 누군가 부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가난해졌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다
15. 누군가 지식이 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무식해졌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16. 누군가 건강하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병들게 됐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기본 관점

□ 개인 이익 추구 긍정 / 공동체 위한 제한, 찬반 팽팽

- 설문은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의 편리를 위해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기본 관점”, “개인 자유'에 대한 생각”,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 등으로 구분함
- 먼저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기본 관점”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은 개인의 이익 추구에 대해 긍정적인 가운데, 공동체 이익을 위한 제한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남
- ‘사람들이 ‘경제적 부'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 본성이다’라는 주장에 90%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인간 본연의 ‘경제적 부'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법과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 이에 대해 ‘동의한다’ 45% vs ‘동의하지 않는다’ 48%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 또한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다’는 주장에 67%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에는 찬반 의견이 팽팽함
 - ‘국민은 국가나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주장에 47%는 동의하고, 45%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기본 관점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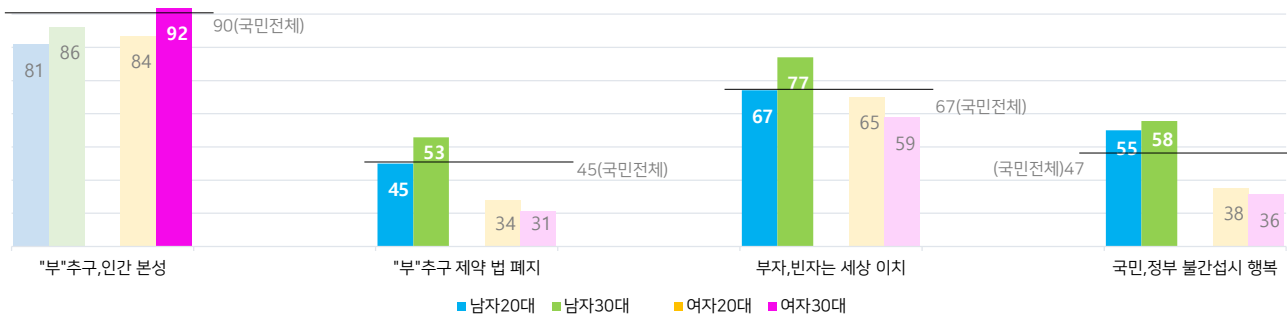
Kstat Point

- ☑ 보수주의자는 인간의 본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적 이익 추구를 가장 중요한 권리로 인식함
 - : 이에 따라, 공동체(국가와 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제약하는 것에 반대함
 - : 진보주의자는 공동체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 추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함
 - : 우리 국민은 개인적 이익 추구를 인정하면서도, 전면적인 개인 이익 추구에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 또한 보수주의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현실은 어쩔 수 없으며, 이러한 현실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국가나 정부의 간섭과 통제에 반대함
 - : 진보주의자는 공동체를 우선하면서 국가 또는 정부의 힘으로 현실을 바꾸려고 함
 - : 우리 국민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동체 이익을 위해 이를 바꾸려는 국가나 정부의 개입에는 찬반 의견이 팽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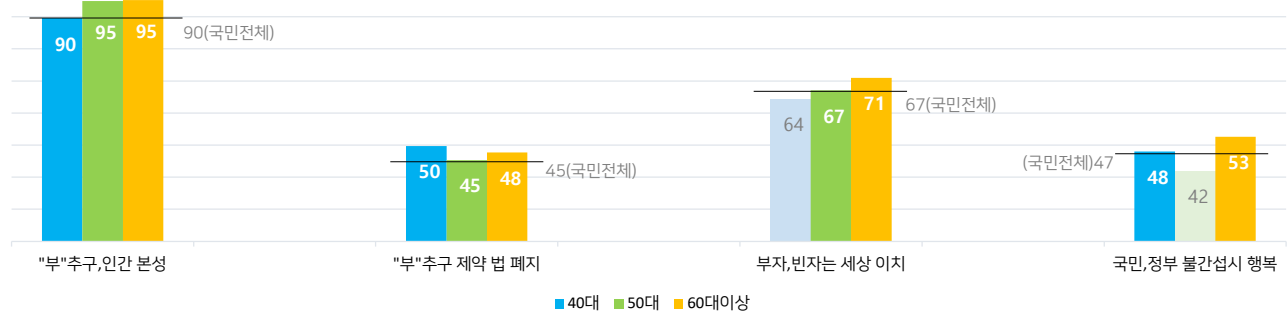
□ 여자 2030세대, 다른 세대보다 '공동체' 중시

-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기본 관점을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자 2030세대와 다른 성/연령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음
- 여자 2030세대는 개인의 전면적인 이익 추구에 반대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지지함
 - "부" 추구 제약 법 폐지' 주장에 2030 여성은 30%대의 낮은 동의를 표했으며, '국민은 정부 불간섭시 행복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30%대의 낮은 동의도를 보임
 - 아래 그림에서 가로 검은 선은 국민전체 동의도이며, 이보다 높으면 진한 막대그래프, 낮으면 연한 막대그래프임
- 이에 비해 다른 성/연령은 전반적으로 국민전체 동의도 이상의 수치를 기록함
 - 특히 30대 남성의 동의도가 매우 높음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기본 관점, 동의도 : 2030세대 남녀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기본 관점, 동의도 : 4060세대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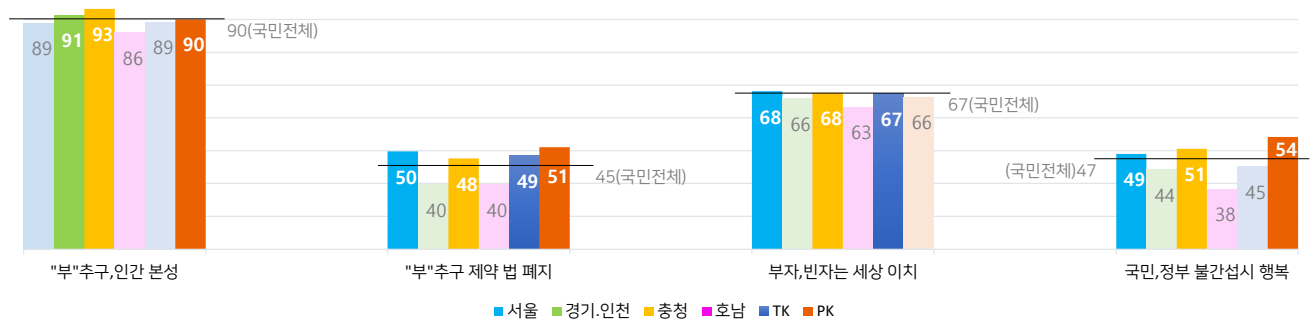
Kstat Point

- ☑ '부' 추구는 인간 본성이라는 점과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현실에 대한 기본 관점은 모든 성/연령대가 동의함 : 강도면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59% 이상의 높은 동의도를 보임
- ☑ 하지만 이러한 인간 본성과 빈부 격차 현실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자 2030세대와 다른 성/연령대의 생각이 다름 : 다른 성/연령대는 국가나 정부의 개입 필요성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지만, 여자 2030세대는 매우 긍정적인 : 각종 정치·사회여론 조사에서 여자 2030세대가 진보적 태도를 취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결과임 : 남자 2030세대는 국가나 정부 개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한데, 이 역시 남자 2030세대가 각종 조사에서 보수적 태도를 취하는 것과 맥을 같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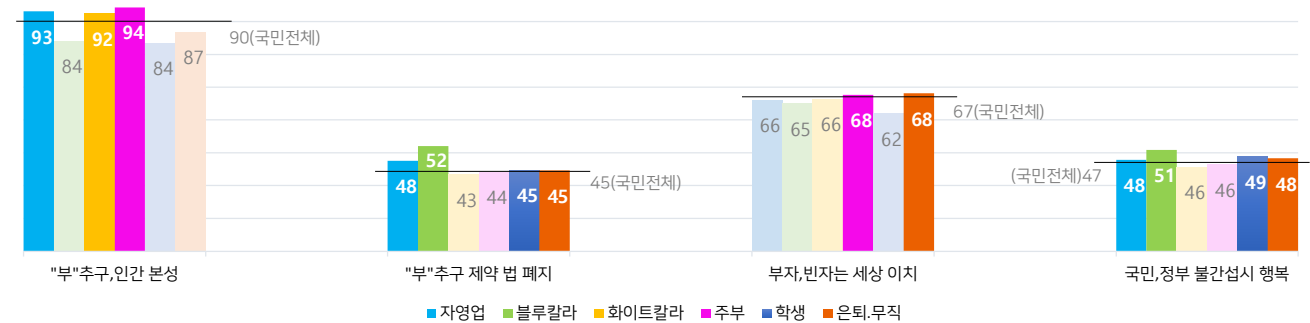
□ 호남과 영남의 관점 차이 있고, 직업별 관점은 비슷

-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관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과 영남 간의 관점 차이가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가로 검은 선은 국민전체 동의도이며, 이보다 높으면 진한 막대그래프, 낮으면 연한 막대그래프임
- 호남지역은 모든 주장에 대해 국민전체 보다 낮은 동의도를 기록한데 비해, 영남(TK와 PK)은 대체로 국민전체 이상의 동의도를 나타냄
 - TK와 PK지역이 국민전체 보다 낮은 동의도를 보인 주장의 경우 그 차이가 매우 적어, 사실상 국민전체 이상의 동의도로 봐도 무방함
 - 한편, 서울과 충청지역도 거의 모든 주장에 대해 국민전체 이상의 동의도를 기록함
- 한편, 직업별로는 큰 차이 없이 비슷한 태도를 보임
 - 화이트칼라 계층의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소폭 낮은 정도의 차이에 그침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기본 관점, 동의도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기본 관점, 동의도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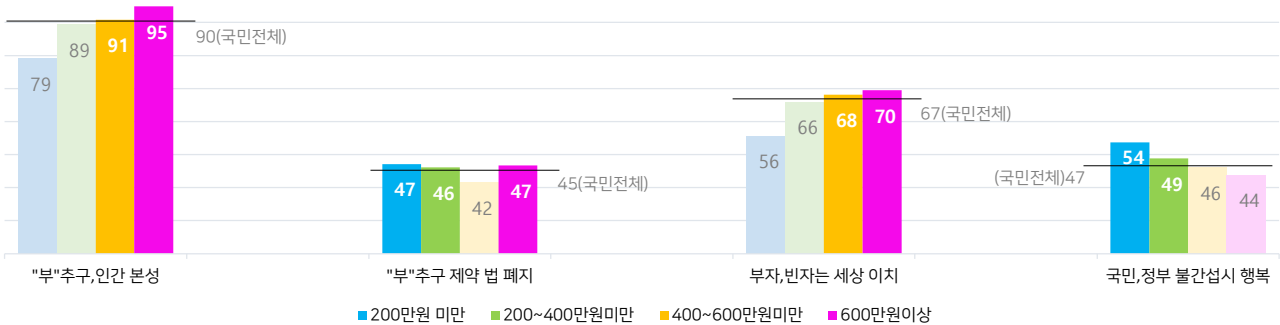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나라 정치는 영남(TK, PK)을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과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으로 대립하는 양상인데,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기본 관점 역시 차이를 보임
 - : 영남은 보수주의 주장에 대한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호남은 낮음
 - : 서울과 충청지역의 경우 동의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보수주의적 관점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됨
- ☑ 직업별 차이는 거의 없는 가운데, 화이트칼라 계층의 동의도가 국민전체에 비해 소폭 낮음
 - : 화이트칼라 계층을 두고 진보적이라고 말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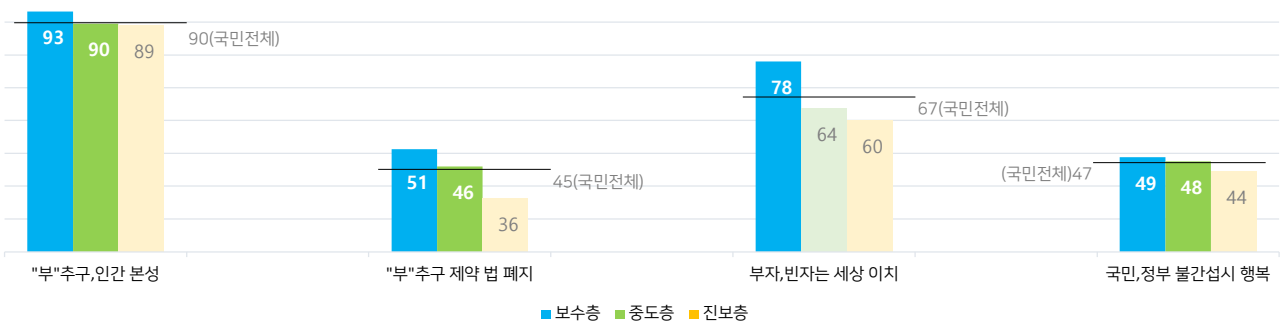
□ 소득별 관점 차이 다소 드러나고, 이념적 차이는 뚜렷

-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기본 관점을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부” 추구, 인간 본성’과 ‘부자, 빈자는 세상 이치’ 동의도가 소득에 비례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 그러나 다른 주장들은 소득별 응답이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임
 - 아래 그림에서 가로 검은 선은 국민전체 동의도이며, 이보다 높으면 진한 막대그래프, 낮으면 연한 막대그래프임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의 동의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중도층, 진보층 순으로 낮아지는 모습이 일관되게 나타남
 - 보수층은 거의 모든 주장에 대해 50% 이상의 동의도를 보임(‘국민, 정부 불간섭시 행복’ 항목만 49% 기록)
 - 진보층은 “부” 추구 제약 법 폐지’ 주장에 대한 동의도가 36%로 매우 낮음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기본 관점, 동의도 : 월평균 가구소득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기본 관점, 동의도 : 주관적 이념성향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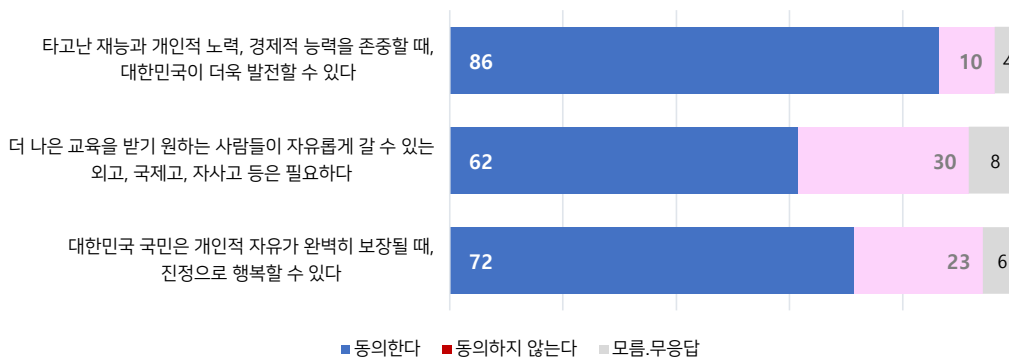
- ☑ 앞서 계층별 응답에서 ‘현실 인식’ 주장은 큰 차이 없이 높은 동의도를 기록하고, ‘현실 대처’ 주장에 대해 동의도 차이가 있었음
 - : ‘현실 인식’은 “부” 추구, 인간 본성’과 ‘부자, 빈자는 세상 이치’ 주장임
 - : ‘현실 대처’는 “부” 추구 제약 법 폐지’와 ‘국민, 정부 불간섭시 행복’ 주장임
- ☑ 이에 비해 소득별로는 ‘현실 인식’ 주장에 대한 동의도가 소득에 비례해 높아지는 특징이 뚜렷함
 - : 즉, 소득이 높을수록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이러한 현실 인식에 반대하는 모습임
- ☑ 한편,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는 보수, 중도, 진보 순의 동의도를 기록, ‘보수주의 신조’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냄

▶ '개인 자유'에 대한 생각

□ 한국민, '개인 자유'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 강해

- “‘개인 자유’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은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조사됨
- ‘타고난 재능과 개인적 노력, 경제적 능력을 존중할 때,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 86%가 동의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개인적 자유가 완벽히 보장될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72%가 동의함
- 또한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외교, 국제고, 자사고 등은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62%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음

‘개인 자유’에 대한 생각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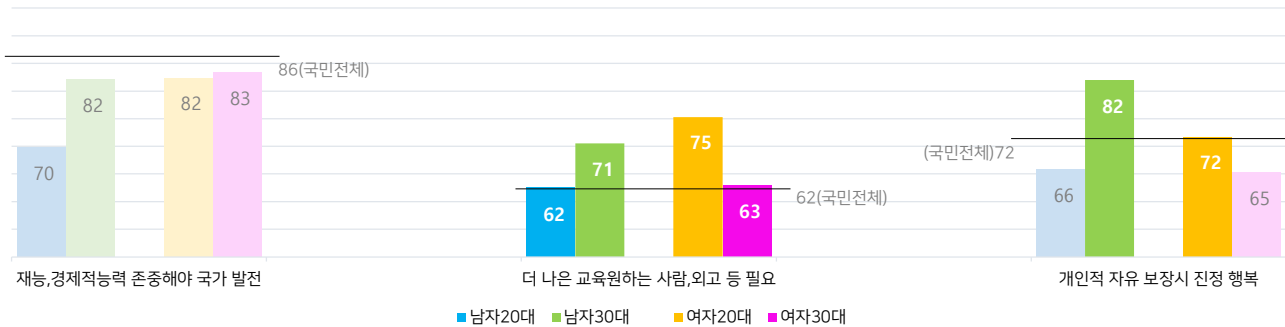
Kstat Point

- ☑ 보수주의자는 개개인이 처한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
 - : 보수주의자는 ‘빈부의 대물림’과 같은 사회적 문제도 개개인이 처한 현실로 인정해야 하며, 개인의 자유는 거의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 이러한 주장의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 차이’에 따른 ‘자유 차이’는 무시되는 경향을 보임
- ☑ 진보주의자는 ‘빈부의 대물림’에 의한 경제적 능력 차이가 ‘자유 차이’로 이어지는 것에 반대함
 - :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도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함
 - : 즉, ‘결과적 평등’, 혹은 ‘기회의 평등’을 전제로 한 ‘개인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임
- ☑ 설문에서 ‘개인 자유’에 ‘전제 조건’이 없는 두 문항의 경우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장임
 - : ‘타고난 재능과 개인적 노력, 경제적 능력을 존중할 때,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 : ‘대한민국 국민은 개인적 자유가 완벽히 보장될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 ☑ 이에 비해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외교, 국제고, 자사고 등은 필요하다’ 주장은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간에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주장임
 - : 외교 등에 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필요하며, 결국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교육 기회 차이’를 낳기 때문임
 - : 이는 ‘공교육 정상화’와 다른 쟁점이며, ‘공평한 교육의 기회 제공’이라는 점에서 의견대립이 형성되는 것임
- ☑ 우리 국민들은 ‘외고 등 필요성 주장’에 동의하고 있어, 보수주의자가 말하는 ‘자유’에 더 동조하는 양상임
 - : 이 지점에서 우리사회가 ‘능력주의’에 치중되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계층 이동 사다리’가 부서져 버린 지금의 상황이 더욱 고착될 것이라는 비판적 지적이 대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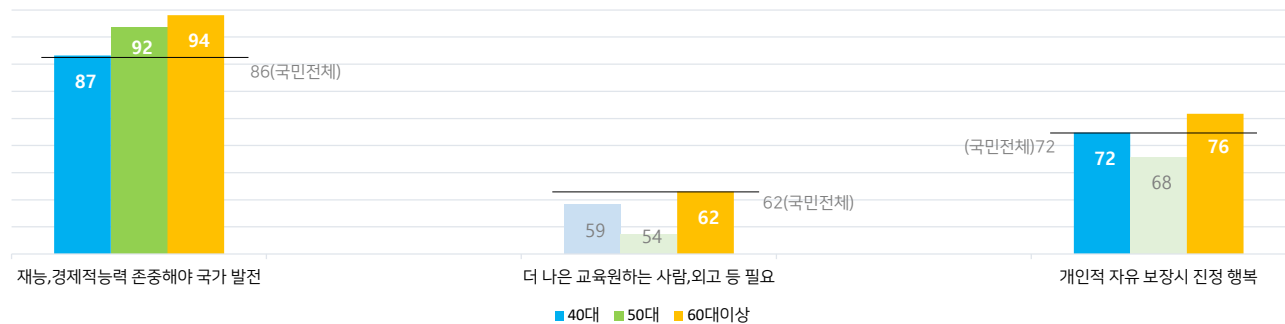
□ 2030세대, '외고 등 필요' 동의도 높아

- '개인 자유'에 대한 생각을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주장에 대해 50% 이상의 동의도를 기록해 '개인 자유'에 대한 강한 호감을 드러냄
 - 아래 그림에서 가로 검은 선은 국민전체 동의도이며, 이보다 높으면 진한 막대그래프, 낮으면 연한 막대그래프임
-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간에 논란이 있는 '더 나은 교육 원하는 사람, 외고 등 필요' 주장의 경우, 2030세대의 동의도가 높은 특징을 보임
 - 여자 20대의 동의도가 75%로 가장 높음
- 4050세대는 국민전체보다 낮은 동의도를 보였으며, 60대이상은 국민전체와 같은 62%를 기록함
 - 50대가 54%로 가장 낮은 동의도를 나타냄

'개인 자유'에 대한 생각, 동의도 : 2030세대 남녀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개인 자유'에 대한 생각, 동의도 : 4060세대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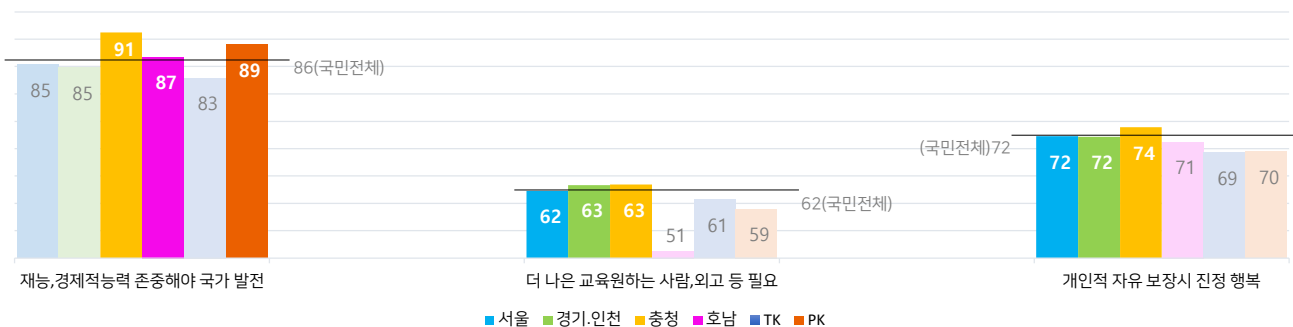
Kstat Point

- ☑ 모든 성/연령대의 '개인 자유' 주장 동의도가 50% 이상의 높은 동의도를 기록, '개인 자유'에 대해 절대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임
- ☑ 세대간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은 '더 나은 교육 원하는 사람, 외고 등 필요' 주장으로, 2030세대는 국민전체보다 높은 동의도를 보인데 비해, 4050세대는 국민전체보다 낮은 동의도를 나타냄 (60대이상은 국민전체와 동일)
 - : 2030세대는 앞서 언급한 '능력주의' 세례를 받고 자란 세대적 특성으로 이해가능한 지점임
 - : 4050세대의 경우 '공교육 정상화'라는 담론에 익숙한 세대이기때, 상대적으로 동의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임
 - : 그렇다고 해서 4050세대가 '능력주의'와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함
- ☑ 또한 '개인 자유'를 강하게 선호한다는 점에서 향후 2030세대를 향한 보수·진보 정당의 포용전략이 발견됨
 - : 2030세대는 사실상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는 '개인 자유'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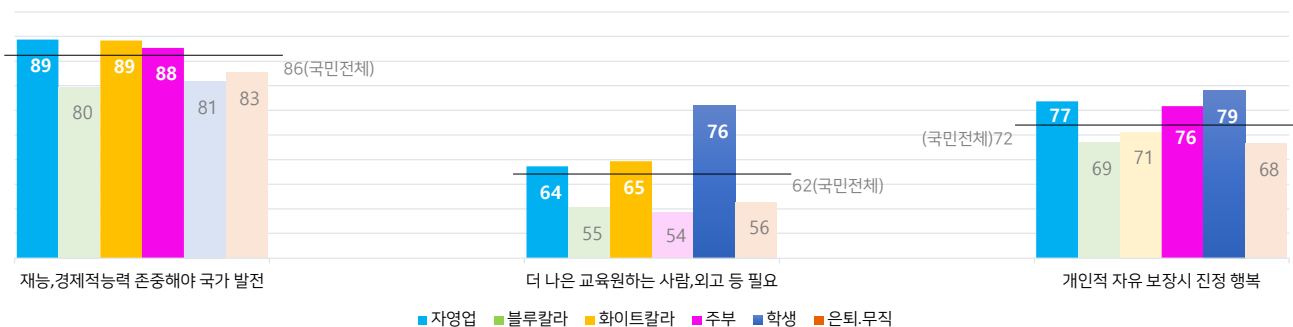
□ '외고 등 필요' 동의도, 지역별 직업별 차이 있어

- '개인 자유'에 대한 생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장에 대해 큰 차이 없이 높은 동의도를 나타냄
 - 아래 그림에서 가로 검은 선은 국민전체 동의도이며, 이보다 높으면 진한 막대그래프, 낮으면 연한 막대그래프임
- 다만, '외고 등 필요' 동의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호남의 낮은 동의도가 주목됨
 - 호남지역의 동의도는 51%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한편, 직업별로도 '외고 등 필요' 동의도를 제외하면,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치를 기록함
- '외고 등 필요' 동의도에 있어 국민전체 보다 높은 동의도를 기록한 직업은 자영업, 화이트칼라, 학생 등임
 - 국민전체보다 낮은 동의도를 기록한 직업은 블루칼라, 주부, 은퇴.무직자 등임

'개인 자유'에 대한 생각, 동의도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개인 자유'에 대한 생각, 동의도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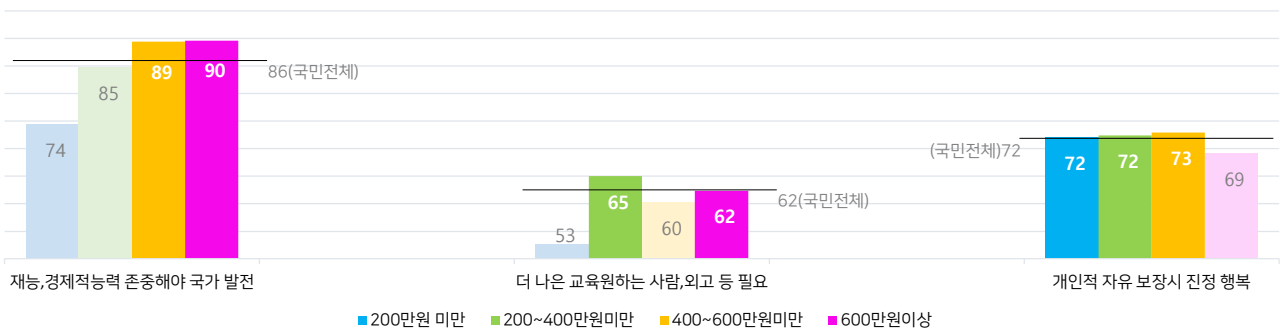
Kstat Point

- ☑ '개인 자유' 관련 모든 주장에 대해 전 지역, 전 직업에 걸쳐 50% 이상의 높은 동의도를 기록함
 - : '개인 자유'에 대한 선호는 성/연령, 지역, 직업과 무관하게 국민 모두의 절대적인 호응을 얻고 있음
- ☑ 앞서 성/연령별과 동일하게 '더 나은 교육 원하는 사람, 외고 등 필요' 주장만 지역별, 직업별 동의도가 다소 차이남
 - : 지역별로는 호남이 상대적으로 동의도가 낮는데, 이는 '공교육 정상화' 담론의 영향력 때문에 보임
- ☑ 직업별로는 '자영업 + 화이트칼라 + 학생' vs '블루칼라 + 주부 + 은퇴.무직자'가 대립하는 양상임
 - : 이 주장이 한국에서는 '능력주의'에 대한 선호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때 자영업자, 화이트칼라, 학생층에서 '능력주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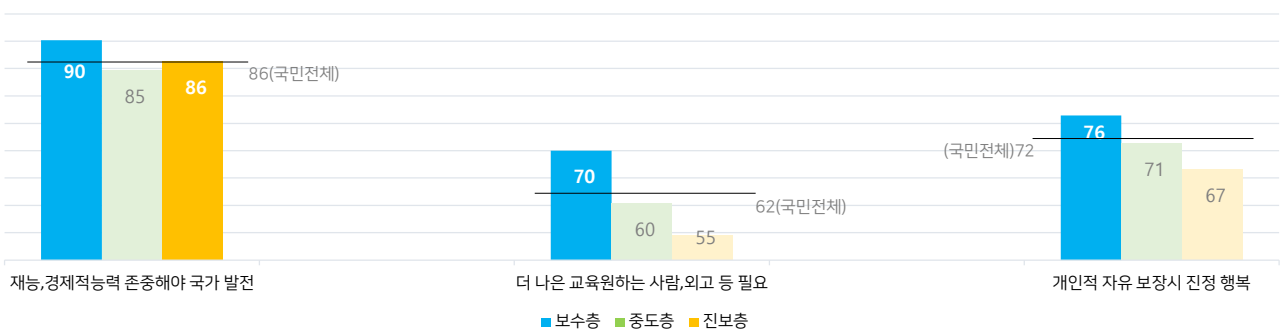
□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대비되고, 이념성향별 차이 나타나

- '개인 자유'에 대한 생각을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과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간의 생각이 대비됨
- '재능, 경제적 능력 존중해야 국가 발전' 주장에 대해 저소득층은 74%가 동의하는데 비해, 고소득층은 90%가 동의함
 - 아래 그림에서 가로 검은 선은 국민전체 동의도이며, 이보다 높으면 진한 막대그래프, 낮으면 연한 막대그래프임
- 또한 '더 나은 교육 원하는 사람, 외교 등 필요' 주장 동의도 역시 저소득층은 53%이지만, 고소득층은 62%로 차이가 있음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는 거의 대부분의 주장에 대해 보수층의 동의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중도층, 진보층 순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
 - 보수층은 거의 모든 주장에 대해 70% 이상의 압도적인 동의도를 기록함

'개인 자유'에 대한 생각, 동의도 : 월평균 가구소득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개인 자유'에 대한 생각, 동의도 : 주관적 이념성향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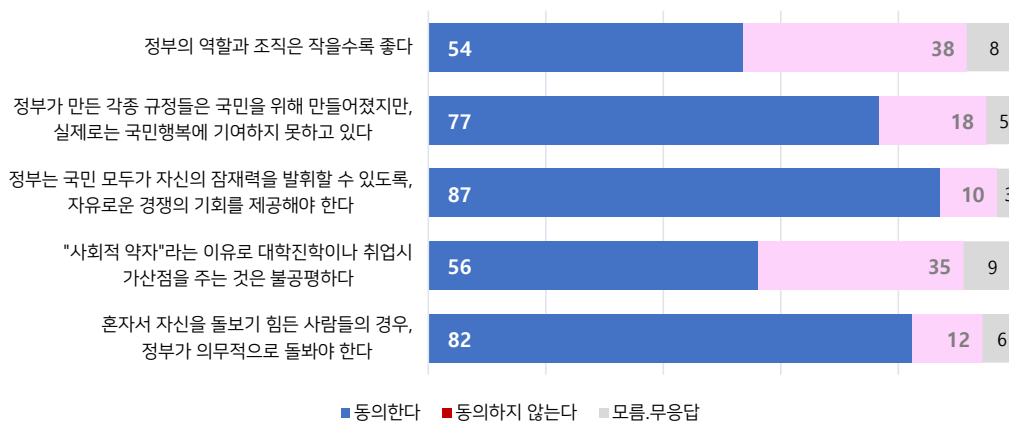
- ☑ '개인 자유' 주장과 관련,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동의도는 비교적 뚜렷이 대비됨
 - : 이는 경제적 토대 차이에서 비롯된 대비로 보이며,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개인 자유'의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임
 - : 즉, 보수주의자들은 '개인 자유'를 말할 때, '경제적 능력 차이'에 따른 '자유'의 차이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 저소득층은 '경제적 능력 차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임
- ☑ 한편, 앞서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기본 관점에 이어 '개인 자유'에 있어서도 보수, 중도, 진보 순의 동의도를 기록, '보수주의 신조'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

□ '정부 역할' 부정적 의견 높고, '약자 복지' 동의도 높아

-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역할과 조직은 작을수록 좋다’, 동의도 54%
 - ‘정부가 만든 각종 규정들은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국민행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동의도 77%
 -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대학진학이나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 동의도 56%
- 하지만 정부가 자유로운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약자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 ‘정부는 국민 모두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동의도 87%
 - ‘혼자서 자신을 돌보기 힘든 사람들의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돌봐야 한다’, 동의도 82%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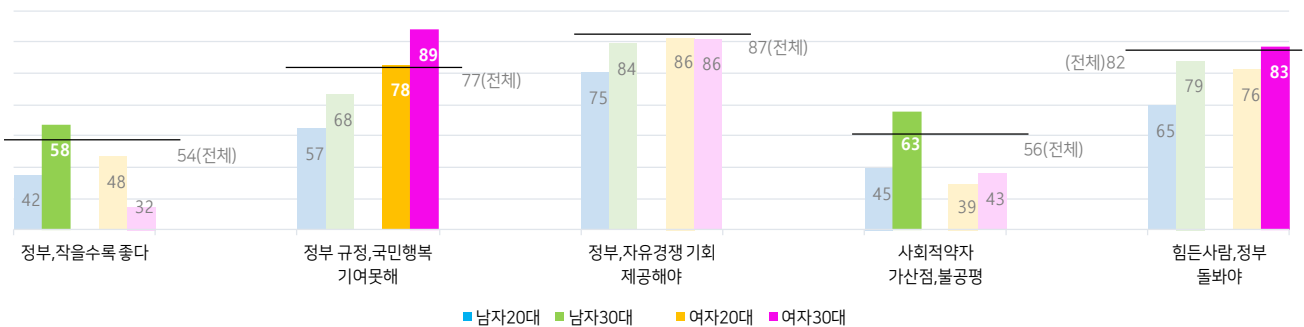
Kstat Point

- ☑ 개인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주의자는 ‘작은 정부’를 원하고, 공동체 이익을 중시하는 진보주의자는 ‘큰 정부’를 원함
 - : 이 연장선에서 보수주의자는 정부의 관료주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규정이 국민행복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 : 진보주의자 역시 관료주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지만 정부 규정 필요성을 포기하지 않음
- ☑ 우리 국민들은 이번 조사결과, ‘작은 정부’를 선호하고 있음
 - : ‘정부 규정, 국민행복 기여 못해’ 주장에 대한 높은 동의도를 볼 때, 우리 국민들은 진보·보수정부를 떠나 정부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 정부의 역할에 있어 ‘국민 모두의 자유로운 경쟁 기회 제공’에 대해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모두 동의하는 주장임
 - : 차이가 나는 지점은 ‘자유로운 경쟁’에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때의 태도임
 - : 보수주의자는 ‘자유로운 경쟁’에 누구도 예외를 뒀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진보주의자는 ‘사회적 약자’의 불리함을 감안해 ‘가산점’을 주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입장임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즉 ‘약자 복지’는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모두 정부의 역할로 인정하는 대목임
- ☑ 우리 국민은 ‘정부가 자유로운 경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사회적 약자 가산점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우세함
 - : 이는 앞서 ‘개인 자유’에서 보았듯이, 우리사회에 ‘능력주의’가 만연해 있는 영향으로 보임
 - : 다만, 사회적 약자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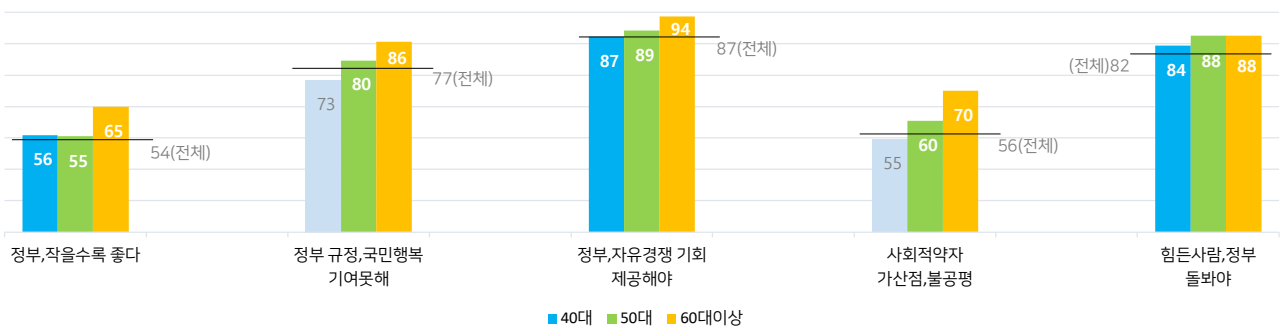
□ 2030세대 내 인식 차이 크고, 4060세대 인식 비슷

-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의 경우 남녀간 차이는 물론 세대간 차이가 나타나는 등 복잡한 모습임
 - 아래 그림에서 가로 검은 선은 국민전체 동의도이며, 이보다 높으면 진한 막대그래프, 낮으면 연한 막대그래프임
 - 먼저 여자 2030세대와 남자 20대는 '작은 정부'에 반대하고, 남자 30대는 동의함
 - 또한 여자 2030세대와 남자 20대는 '사회적 약자 가산점, 불공평' 주장에 반대하고, 남자 30대는 동의함
 - '정부 규정이 국민행복에 기여못한다'는 주장에 여자 2030세대는 높은 수준의 동의를 표한데 비해 남자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도를 기록함
 - '힘든 사람을 정부가 돌봐야 한다'는 주장의 경우, 같은 세대 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동의도를 기록함
- 2030세대의 복잡성과 달리 4060세대는 거의 비슷한 인식을 나타냄
 -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도가 비례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 동의도 : 2030세대 남녀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단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 동의도 : 4060세대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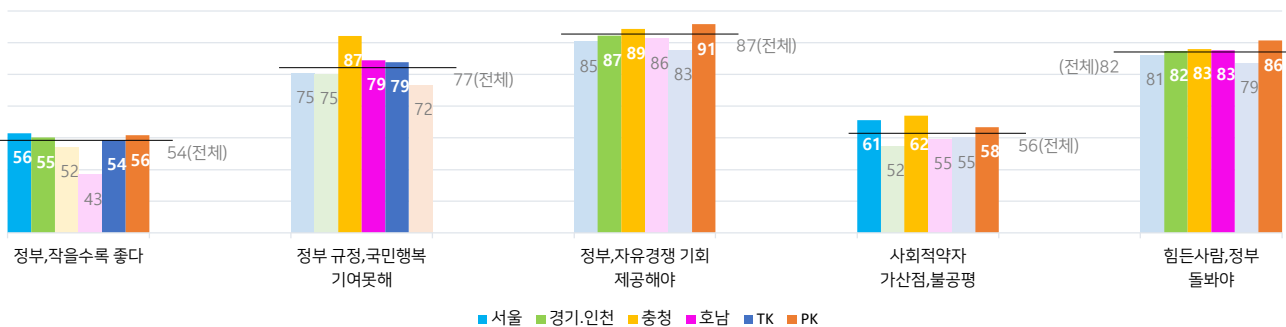
Kstat Point

- ☑ '작은 정부' 주장에 대해 2030세대는 반대의견이 우세하고(남자 30대 제외), 4060세대는 동의 의견이 우세함
 - : 이 주장만 놓고 볼 때 2030세대는 보수주의와 거리가 있는데,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2030세대를 지원하는 정부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간 생각 차이가 큰 '사회적 약자 가산점'에 대해 4060세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2030세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30대 남자 제외)
 - : 이는 앞서의 '능력주의'가 4060세대의 주도로 우리 사회에 정착했고, 2030세대에 전파된 것임을 방증함
 - : 2030세대가 중시하는 '공정성'에 아직까지는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려는 의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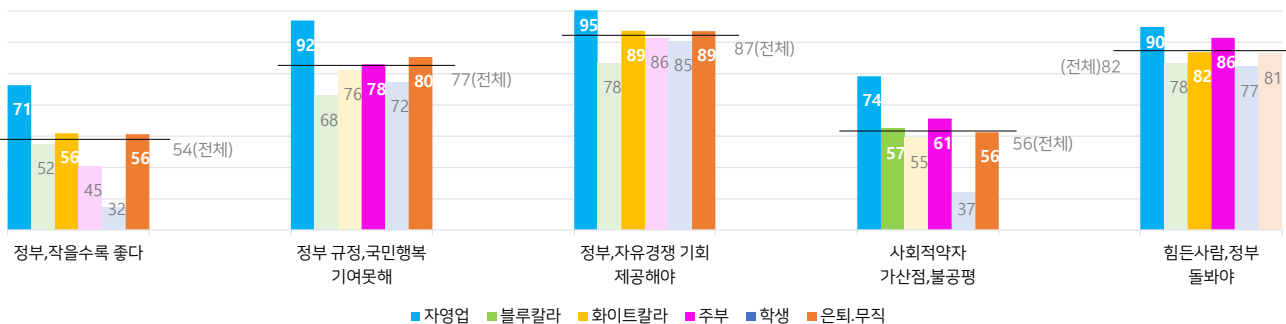
□ 지역별 차이 거의 없고, 자영업자 동의도 특히 높아

-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장에 대해 큰 차이 없이 높은 동의도를 나타냄
 - 아래 그림에서 가로 검은 선은 국민전체 동의도이며, 이보다 높으면 진한 막대그래프, 낮으면 연한 막대그래프임
- 직업별로 살펴보면, 모든 주장에 대해 자영업자의 동의도가 특히 높은 특징을 보임
- '사회적 약자 가산점, 불공평' 주장 동의도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직업의 동의도가 국민전체보다 높음
 - 자영업자가 가장 높고, 주부, 블루칼라, 은퇴.무직자 순으로 높음
 - 국민전체 보다 낮은 동의도를 기록한 직업은 화이트칼라와 학생층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 동의도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 동의도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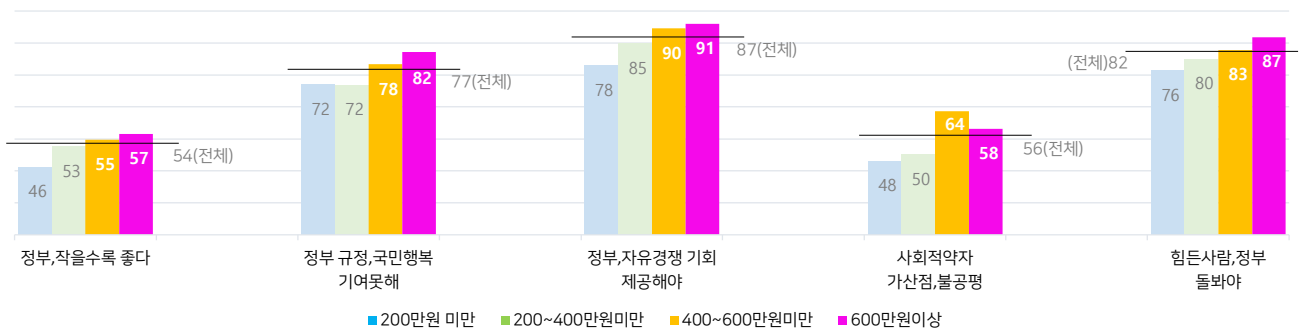
Kstat Point

- ☑ '개인 자유'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주장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음
 - : 대한민국이 사실상 1일 생활권에 들어가면서, 지역별 특성 또는 편차가 거의 사라진 결과로 보임
 - : 다만,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는(이번 조사에서는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기본 관점) 호남과 영남이 대립하는 양상이 유지되고 있음
 - : 또한, 지역별 차이보다 성/연령별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보임
- ☑ '정부의 역할'에 대해 자영업자가 모든 주장에 걸쳐 높은 동의도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과정에서 겪은 정부에 대한 불만과, 정부 지원이 절실한 현실이 중첩된 결과로 분석됨
 - : 정부에 대한 불만은 '작은 정부' 동의, '정부 규정, 국민행복 기여 못해' 동의, '사회적 약자 가산점, 불공평' 동의로 나타나고,
 - : 정부에 대한 기대는 '자유경쟁 기회 제공해야' 동의, '힘든 사람, 정부 돌봐야' 동의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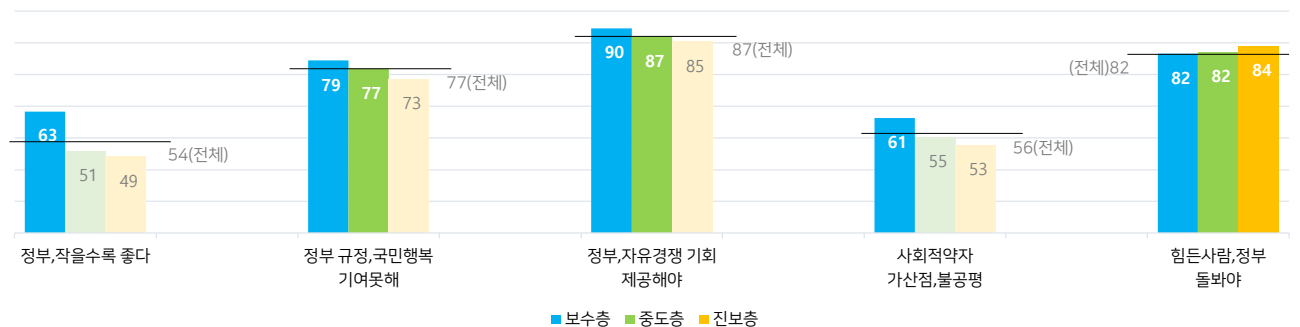
□ 저소득층 동의도 낮고, 이념성향별 차이 뚜렷

-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전반적으로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동의도가 낮음
 - 이들은 '정부, 작을수록 좋다'에 반대하고, '사회적 약자 가산점, 불공평' 주장도 반대함
 - 이에 비해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위 주장에 대한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아래 그림에서 가로 검은 선은 국민전체 동의도이며, 이보다 높으면 진한 막대그래프, 낮으면 연한 막대그래프임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는 모든 주장에 대해 보수층의 동의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중도층, 진보층 순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
 - 다만, '힘든 사람, 정부 돌봐야' 주장의 경우 근소하게 진보층의 동의도가 높음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 동의도 : 월평균 가구소득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 동의도 : 주관적 이념성향별 (자료:케이스탯, 2022.09.06조사, 단위:%)



Kstat Point

- ☑ 이번 조사한 '보수주의 신조'에 대한 동의도를 살펴보면, 주관적 이념성향별 응답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냄
 - : '개인인 공동체'에 대한 기본 관점, '개인 자유'에 대한 생각,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 등 모든 주장에 대해 이념성향별 응답이 일관되게 일치함
 - : 영국과 한국의 사회상황이 다르고 이념지형이 다르지만, '보수주의 신조'에 대한 동의 여부는 큰 틀에서 동일함
 - : 향후, 한국 보수정당의 지향점으로 영국의 '보수주의 신조'를 벤치마킹할 이유가 충분해 보임
- ☑ 다만, 한국적 상황에서 2030세대를 포용하는 것이 보수·진보 정당 모두의 핵심과제이기에, 2030세대의 동의정도를 면밀히 파악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 특히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능력주의'로 대표되는 개인이익 추구에 대해 여자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2030세대의 공동체 중시 경향에 유의해야 함
 - : 보수정당이 이 지점을 포착하지 못한다면 2030세대 포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개인 자유'에 대한 2030세대의 조건없는 옹호를 민감하게 인식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60, 61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60호와 61호는

각각 10월 13일(목요일), 10월 27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10월 사회지표는 10월 20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

